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27
----------	-------

발의연월일 : 2022. 5. 17.

발 의 자 : 윤재갑·최기상·이개호
김민철·신정훈·위성곤
소병철·홍문표·전용기
주철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63퍼센트가 산림인 우리나라에서 산과 숲은 예로부터 의식주의 바탕이자 문학, 예술, 철학 등 우리 민족 정서의 근원이었음.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등산·트레킹 등 사람 간 접촉이 적은 산림 내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과 아울러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의미 있는 여가활동을 추구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산림문화의 체계적인 발굴과 활용 및 새로운 산림문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과 제도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산림문화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산림문화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며, 이를 위해 산림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국내외 교류협력,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 근거 등을 마련하여 품격 높은 산림문화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신설 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림문화”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정신적·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산림과 관련한 전통과 유산 및 생활양식 등과 산림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창작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1의2. “산림휴양”이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

제6장의 제목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리”를 “산림문화의 진흥”으로 한다.

제6장에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산림문화의 확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수집·기록·보전하고, 이를 학술대회, 세미나, 전시, 번역·출판,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 확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3(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산림문화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발굴·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4(국내외 교류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5(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① 산림청장은 산림문화의 진흥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

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산림문화진흥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 ④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보고·검사) ①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8조의5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제3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문화·휴양”이라 함은 <u>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총체적 생활양식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u>	제2조(정의) ----- -----. 1. “산림문화”란 <u>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정신적·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산림과 관련한 전통과 유산 및 생활양식 등과 산림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창작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u>
<신 설>	1의2. “산림휴양”이란 <u>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u>
2. ~ 9. (생 략) 제6장 <u>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리</u>	2. ~ 9. (현행과 같음) 제6장 <u>산림문화의 진흥</u>
<신 설>	제28조의2(산림문화의 확산)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수집·기록·보전하고, 이를 학술대회, 세미나, 전시, 번역·출판,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u>

<신 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 확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3(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산림문화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발굴·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의4(국내외 교류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의5(산림문화진흥 전문기

관) ① 산림청장은 산림문화의
진흥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림문화진흥 전
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
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
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지정된 전문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산림문화진흥 업무를 수행하
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p><u><신 설></u></p>	<p><u>④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제32조의2(보고·검사) ①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u></p>
<p>제33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u><신 설></u></p>	<p>제33조(청문) -----</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제28조의5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p>
<p>제38조(과태료) ① ~ ③ (생략)</p> <p><u><신 설></u></p>	<p>제3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u></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한다.</p> <p>⑤ ----- 제4항까지의 ----- ----- ----- ----- -----.</p>
---	---